# 광주·전남 총선 대표직함 논란 속 '이재명' 제외 잇따라

## 이재명 등 특정 정치인 이름 사용 규정 정당-선관위 제각각

## '정당한 선거 마케팅 vs 당대표 영향력 의존' 논란만 부채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 사이에 '이재명 마케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당 방침에 따라 대표직함에서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는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논의 끝에 대표경력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라는 직함 중 '이재명'을 빼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로 각종 여론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식직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전체 직함을 표기한 것은 지난 7월24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로부터 수여받은 공식직함 때문으로 '이재명팔이'가 아니다"며 "선관위에 직함전체를 표기하는 것 또한 선거법상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민주당 경선이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도 선관위 등록 경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로 변경했다.

박 예비후보는 "명백한 사실이고, 민주당 당규와 선관위 지침에 부합하는 경력이지만,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언론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고, 상대 후보 공세에 의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저부터 깨끗한 경선의 사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밖도 모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선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또 다른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를 대표직함에서 제외시켰고, 노무현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시킨 후보들도 나오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고민은 당 방침과 선관위 규정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2024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 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경력은 공식선거법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비후보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대표직함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식 사이트에 등재할 경우 해당 후보자 입장에선 '당 방침'에는 위배되나, '선관위 규정'에는 부합되는 이중적 상황이 발생할 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에 등록하는 대표경력도 2개까지 허용되지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하나의 직함만을 등록할 경우 '직함 논란' 발생 시 대체 직함이 없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자만 놓고 이뤄진다면 중앙당 지침을 따르는게 맞지만 보수, 진보, 신당, 무소속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선관위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딜레마"라며 "정당과 선관위 간 섬세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전남개발공사, 무재해 달성 위한 스마트한 동절기 안전점검 및 캠페인

전남개발공사는 안전사고 없는 현장 실현을 위해 오룡지구 현장 내 스마트안전장비 시연장을 마련하고 동절기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으로 오룡지구 내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장비 사용법 설명 및 시연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스마트안전장비를 확대 보급키로 하였다.

금번 시연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와 중장비간 이격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장비접근경보시스템, 추락사고 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스마트안전조끼, 손 끼임이나 허리 부상을 방지 할 수 있는 맨홀뚜껑개방기 등 현장의 잦은 사고 유형에 맞추어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장비들로 선정하였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안전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단 한명의 근로자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현안,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강기정 광주시장 '5·18 기념행사 운영 방식' 작심 비판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민간 기념행사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성 발언을 쏟아냈다.

강 시장은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5·18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여,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4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개최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치른 5·18(기념)행사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분열돼있는 현재 상황이 시민들에게 창피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민간주도 기념행사 자리에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왜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비움'이라고 표현한 만큼 44주기 행사는 아무 행사도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사위는 여전히 광주시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행사위의 역할이 민간주도 행사의 역사 전통 계승에 있고, 이에 한계가 있다면 다가 올 5·18 50주기를 위한 행사위원회를 새로 조직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매듭지어지지 않은 갈등을 지적하고, 그간 민간행사를 주도해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혁신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행사위의 5·18 44주기 민간행사 개최를 앞두고 행사위 총감독 선임 문제와 운영 방향 개선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행사위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행사위 해체 등 강경 대책을 포함한 쇄신안도 제기됐다.

광주시민 단체들은 5·18 8주기였던 1988년 5월 17일 남구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처음 열린 5·18 전야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민간 주도 5·18 행사를 펼쳐왔다. 전문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2017년 행사위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했다.

김수권 기자

## 전남도-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업 강화

### 전담반 구성해 '전남형 교육모델' 등 공모과제 발굴 협력키로

전남도가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전담팀을 구성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 발굴,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2024년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중심 돌봄형, 지역산업 연계형, 혁신도시 연계형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계획 발표 이후 관심 시군을 파악해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돌봄교육반, 지역산업반, 혁신도시반 등 약 40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육발전특구추진단(TF)을 구성해 시군별 제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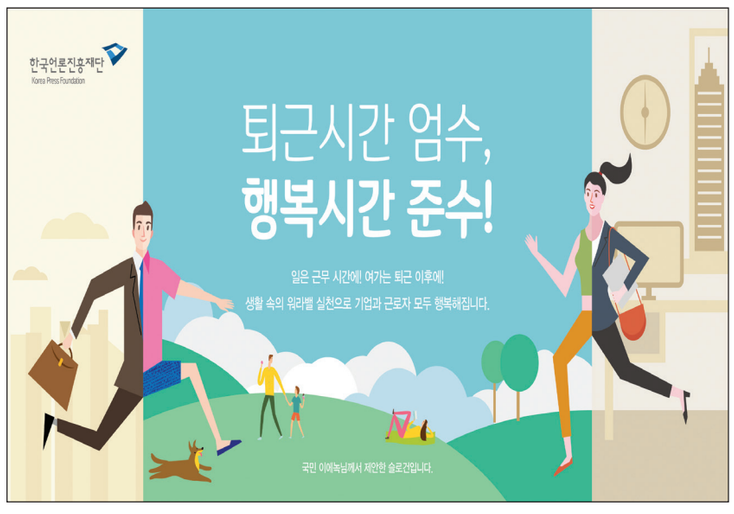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라이즈(RISE)사업, 글로컬대학30, 교육발전특구 3종 세트로 전남 교육의 획기적 변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전남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경민(810924-1932319)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450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문주영, 이유담, 이유준, 이채은
한정승인수리일 : 2023.12.22.
공고기간 : 2023.12.28. ~ 2024.02.28.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2, 101동 509호
(의도이동, 일우한란아파트)
문주영 ☎ 010-7371-100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